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본격화... 바이든 중동 정책 '시험대'

공개반대 자제하던 중 난민촌 폭격 참사... 바이든 행정부 '당혹' 유대인-친팔레스타인 표심 두루 의식 '줄타기 행보' 위태로워

이스라엘이 미국의 우려와 반대 속에 미뤄온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곤혹스럽게 됐다.

11월 미 대선 표심에도 영향을 주게 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온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이 또 한차례 결정적인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목격자를 인용해 다수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전은 한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그어 놓은 '레드라인'이나 다름없었다. 한때 140만 명 이상의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대피중이던 라파에서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대규모 지상전은 반대한다고 미국 정부는 한동안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직접 경고한 바 있다.

그렇던 미국은 최근 라파의 민간인들이 상당수 대피한 상황에서 라파 지상전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통계상 최근 3주간 약 100만명의 민간인이 라파에서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 군사-안보 당국자들 입에서 점점 라파 지상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었던 것이다.

지난 22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한 대담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작전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보고에 따르면 많은 민간인이 라파에서 빠져나왔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라파 민간인 피해를 고려해가며 군사 목표를 달성할 계획에 대해 브리핑 받았다고 소개하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봐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라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뒤로 물린 듯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라파 공세의 고삐를 당겼는데, 이스라엘의 26일 라파 난민촌 폭격으로 민간인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당혹스럽게 됐다.

라파 지상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던 상황에서 라파에서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중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상전 본격 전개 과정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어날 경우 미국은 더욱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지지하되, 11월 대선을 앞두고 표출된 지지층 내부의 반발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도 결집되어 바이든 행정부의 줄타기 행보도 위태로운 형국이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에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떠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최소 5개 여단 군용 차량들이 라파 중심부에 접근했다. /연합뉴스

대한 무기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중요한 선거 자금 공급원인 유대계와, 경향주 승부에 영향을 주는 이슬람계의 표심을 두루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갈 지(之) 자' 행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근래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퍼지는 동안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만든 반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지만 지지층 내부의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단 백악관은 라파 지상전과 관련,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공격 권리를 인정하되, 민간인 피해 방지를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7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왔듯이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라파

난민촌 폭격에 대해 모종의 '페널티'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미국 시민을 포함한 7명의 구조단체 직원 사망으로 연결된 이스라엘군의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차량 오폭 사건 직후 이스라엘 측에 민간인 보호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적도기니와 동반자관계 격상 '미국 견제'

오비앙 대통령 국민 방중... 적도기니, 中 해군기지 건설지 거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을 국민 방문한 데 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오비앙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적도기니 경제 사회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포함한 프로젝트 협력과 빈곤 퇴치, 산업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공동이익과 국제적 정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중서부 대서양 해안에 있는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최근 들어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양국 간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는 국가다.

중국은 적도기니에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을 제안하면서 항구도시 바타에 해군기지 건설도 추진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적도기니는 1979년부터 45년째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장기 집권자인 오비앙 대통령을 놓고 각종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비앙 정권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시 주석 발언은 아프리카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맹주로서 미국 견제에 맞서는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비앙 대통령은 "중국은 위대한 동방 국가

이자 적도기니의 좋은 형제, 믿음직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앙골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도기니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 어떤 대만 독립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자국 외교 수장의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하는 관행을 34년째 이어올 정도로 이 지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오비앙 대통령을 위해 21발의 예포 발사를 포함한 환영식을 마련했고 시 주석 부부가 오비앙 대통령 부부를 위해 별도의 환영 만찬도 베풀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트럼프 "340억은 내야 점심 한 끼" 후원 압박

감세·규제철폐 내세워 노골적 '거래' 종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석유재벌 등 억만장자들을 향해 감세 등을 내세워 노골적인 고액 후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법 비용 부담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후원자들과 접촉을 꺼리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노골적으로 전문학적 금액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석유재벌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석유회사 경영자들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폐기를 약속하며 자신의 재선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덕분에 이들이 피할 과세와 규제를 고려하면 10억달러 지원은 좋은 '거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또 다른 고액 후원자 모임에서는 한 기업인이 자신에게 100만달러를

후원하고 오찬을 함께하기를 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와 식사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분은 2500만달러(약 340억원)는 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기업인은 공화당에 200만~300만달러 정도를 후원했다"고 소개하며, 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 정도는 지원해야 "매우 기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이뤄놓은 '부자 감세'를 2025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은 감세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역사상 최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피하는 방법은 자신의 재선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에는 정치 자금 요청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고, 2020년 대선 이후 경우 마지못해 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했지만 '필요악' 정도로 여겨 왔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